

# 광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홀로서기 돕는다

### 시-LH전남본부 '주거복지 지원' 업무 협약 전국 3번째 시범실시...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주시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 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시범 실시, 관심을 모은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약칭)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

의 사회 복귀·자립을 위해 탈원화(탈시설화)가 강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은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 주택과 주거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LH전남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협약과 매입임대주택 2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자립생활주택 거주 형태는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이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매입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

지·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1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 한다.  
특히 시는 자립생활주택운영 주야간 위기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이 퇴거 후에도 지속 사례 관리를 추진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배제 대상이 아니라 환경 조성 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자립생활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테러 대응방안 토의 23일 오전 광주시청 지하층 총무실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상황 보고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이 각 기관 관계자들과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姜시장, 시의원들에 친서...소통 행보

### "의정활동 세심하게 지원" 약속

정무장 광주시의회의장이 광주시와의 인사 교류에 아쉬움을 표현한 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소통을 약속했다.  
강 시장이 취임 2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시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정 의장 등 23명 전체 시의원에게 친서를 보냈다.  
강 시장은 "항상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깊이 고민했고 그 누구보다 의정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후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출범 초기 상호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개원식 연설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위한 '변화와 활력'의 두 수레 바퀴라는 제 진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두 바퀴가 모두 방향과 속도를 맞춰야 시민들의 행복을 실은 '광주'라는 수레가 '당당하게 빠르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함께 하겠다.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시민 행복으로 가는 '축적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기자

## 남구·북구의회 임시회 돌입...추경안 등 심사

광주 남구의회와 북구의회가 10일 간 임시회를 개최한다.  
남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해 9월1일까지 10일 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9건·일반안 2건 등 총 1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도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

작으로 9월2일까지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동의안 등 안건 심사 ▲현장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강승희기자

##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논란 법정 간다

### 김옥수 의원, 광주지법에 당선무효 소장 제출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출 관련 위법성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23일 "의장 당선 무효와 직무정지 등을 담은 소장을 광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지 또는 내부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의장단 예정자 5명의 실명과 추천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언론 보도와 관련,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임시의장이었던 무소속 김옥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을 요구하자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2차례 이어진 정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해 의장을 선출했다.  
김옥수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의 규칙 제14조에 '본회의 중 개의,

정회, 폐회, 산회 등에 따른 모든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다'는 규정을 의원들에게 고지했다"며 "정회 중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 추천 후보를 의장에 당선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이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에 의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희기자

## "광주시 전략산업 추경 주먹구구 편성"

### 강수훈 시의원 "추진 의지 없다"

광주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3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전략사업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의 요구 조건을 반영

하는 데 있어 시는 부랴부랴 한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시에서 발표한 2027년 이후 건설될 공공임대 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근본 대책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 그는 "올해 3월 기준 135개 중 94개 인공지능기업이 광주에 개소했지만 기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을 감액할 정도로 행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광주에 정착한 인공지능 기업의 가슴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비 8천38만7천원과 주거비 지원으로는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시는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정액 13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강 의원은 "민선 8기 광주시는 어떤 전략적 선택과 판단으로 지금까지 이행돼 온 사업과 과업을 완수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강기자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신수정 시의원 대표발의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

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박선강기자



국민연금 덕분에 가족들 생양이 커졌습니다

<김용호씨와 남원순씨의 딸 김지현씨>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나의 걱정은 가벼워지고  
가족의 행복이 늘어납니다

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행복한지금


